

브라질 사회의 녹색성장 전략: 패러다임을 바꾸자

라디스라우 도우보르*

최근 수십 년간 공공정책의 철폐와 야경국가의 아젠다를 부르짖었던 인물들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기의 기회에 사회적 명운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제를 재정비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시행을 선택해야 한다.

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9년 3월 5일

지난 30년간 기업들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갈구하였고, 쟁취해냈다. 이들은 정부가 없어야 주요한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시장과 자율규제만으로도 경제적 균형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스템의 과점은 경쟁메커니즘을 급격히 약화시켰고, 시장을 황폐화시켰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란 허상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정부의 정책수단, 규제가 무력화되었고, 시장과 자율규제의 메커니즘이 황폐화됐으며, 시스템적인 통치력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경제위기와 더불어 우리가 당면한 6가지 주요한 당면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 에너지 생산 패러다임의 재정의

우리의 비극을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부분별 위기는 차치하더라도 지역적, 국가적, 전지구적 측면에서 심각한 거버넌스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 저자는 Pontifícia Universidad Católica de San Pablo의 경제학 교수이며, UN을 포함한 다양한 기구의 자문을 맡고 있다. *Democracia Econômica* (Vozes, Petrópolis, 2008)를 비롯한 여러 논문을 저술한 바 있다. 홈페이지는 www.dowbor.org이며, 이메일은 ladislau@dowbor.org 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통치 메커니즘이 부적절하다는 데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과점화는 시장의 규제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 및 정부 개입과 계획 능력의 재확립,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참여형태의 확대, 네트워크의 수평적 관리체제 도입 등의 대안들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중심역할도 당연히 재확립되어야 하나, 좀 더 수평적인 차원에서 연계된 다양한 논쟁자들의 참여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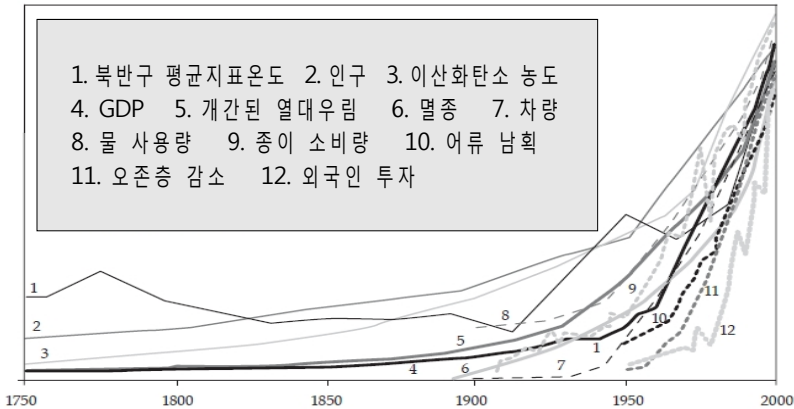
익나시 작스(Ignacy Sachs)는 금융위기와 에너지 위기 간의 수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발전모델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이상주의에 경도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불운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환에서 <도표 1>은 175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의 다양한 거시적 흐름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치들은 재조정되었으며, 몇몇 수치는 최근의 통계치만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진행 경과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도표의 전반적인 형태는 전통적으로 인구, 기후, 차량 생산, 종이 소비량, 수질 오염도, 해양 및 기타 생물의 개체 감소도 등 기존에 독립적으로 연구되었던 분야들이 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는 환경적 도전의 영역이 다양한 만큼이나 우리에게 심대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¹⁾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 지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경향을 경제성장의 주요한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래된 문제의 질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 경제성장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자연자원의 총량도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여야 하는가? 경제가 현재에 도달하기까지 인간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²⁾

1) 온라인상에서 도표를 확인하고 싶으면 <http://dowbor.org/ar/ns.doc>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도표의 좀 더 상세한 버전은 www.newscientist.com/opin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석표와 원전은 <http://dowbo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m Jackson, David Suzuki, Jo Marchant, Herman Daly, Gus Speth, Liz else, Andrew Simms, Suzan George y Kate Soper 등이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2) “How Our Economy is Killing the Earth,” *New Scientist*, No. 2678, 18/10/2008, p. 40.



〈도표 1〉 환경지표의 경향 (1750년부터 현재)

출처: New Scientist, No. 2678, 18/10/2008,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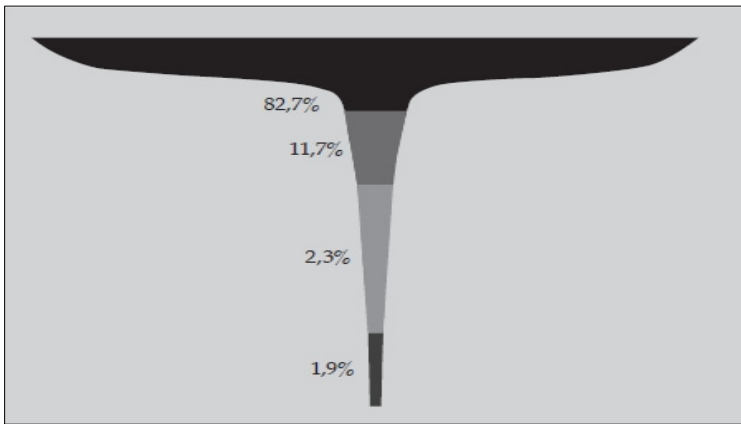
경제성장으로 인해 초래된 불편한 압력의 수렴현상은 명백하다. 바다에 서식하는 종들을 멸종시키지 않고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하함수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량 증대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동차 생산량 및 다른 기계류 생산 증가를 언급하지 않고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세계금융위기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일부 지역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러나 좀 더 폭 넓은 시선으로 현실을 관찰하면, 방제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해법들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조직화되어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자각을 일깨워주며, 이를 통해 더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Ignacy Sachs는 이런 딜레마를 “우리는 어떤 발전을 원하나? 이러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정부와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경쟁을 도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잘 요약하고 있다. 68억 명이 살고 있고, 매년 76백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방식은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강력한 테크놀로지를 고안해 내며, 우리의 지구는 완전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금융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시점에서의 근본적인 질문은 분명해 보인다.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좀 더 긴급하

계 자원을 투입해야 할 이 시점에 전 세계적 금융투기의 광풍 속에서 금융의 전 세계적 잠재력과 우리의 경제력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II. 불평등한 경쟁에 대한 항거

기술혁명으로 파생된 상품에서 이윤을 얻게 된 수십 년 전부터 경제의 금융화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윤집중의 정도가 터무니없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³⁾



〈도표 2〉 소득 분배

출처: UNDP(유엔개발계획): Human Development Report 1992. Global Dimensions of Human Development, UNDP /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Oxford, 1992, p. 35, 및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a Crossroads: Aid, Trade and Security in a Unequal World, UNDP, New York, 2005, p. 37.

3)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작이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한 최근의 가장 날카롭고도 뛰어난 분석은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05, the Inequality Predicament* (UN, New York, 2005)이다. 세계은행은 *The Next 4 billion* (IFC, Washington, DC, 2007)에서 현재 세계 인구의 2/3에 달하는 40억 명의 인구가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분석은 필자의 *Democracia Econômica* (Vozes, Petrópolis, 2008)이나 논문 “Inovação Social e Sustentabilidade”를 참고하기 바란다. 두 편 모두 <http://dowbo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인 잔처럼 생긴 도표의 모양으로 대변되는 경제력 집중의 이미지는 흥미롭지만, 우리는 이 이미지의 심각성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부유한 20%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82.7%를 소유하고 있으며, 빈곤한 제삼삼분위의 사람들은 고작 전체 부의 6%를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1960년대에 상위 20%의 부유층은 하위 20%의 빈곤층이 보유한 부의 70배를 지니고 있었으나, 1989년에는 140배로 늘어났다. 부의 과도한 집중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양산한다. 가족의 경제상황을 개선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산력으로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없는 수백만의 삶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결국 수백만의 사람들이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지구상 제일삼분위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거짓된 경제의 세계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숨죽이며 사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경제력의 집중은 단순히 금융투기에 의해서 야기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자신들만을 위해 지구상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절대로 백안시할 수 없는 일이다. The Economist지는 금융 및 기술진보의 결과로 얻어진 과도한 사회적 잉여에 대한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금융서비스 산업은 심각한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부문에서의 기업의 이윤은 80년대 초의 10% 수준이었으며, 그 정점인 2007년에는 40%에 달했다.⁴⁾ 이는 다시 말해서 기술혁신을 생산하는 부문, 금융시스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사이에 분명한 분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⁵⁾

이런 데이터를 고려할 때, 세계금융위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 기반을 재정립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이 전부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하지도 않다. 하지만 금융은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잘못하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절대로 과해서는 안 된다. The Economist지는 투기자본에 대응하는 동안 발생한 이러한 딜레마를 적시한 바 있다. 사실 선거는 그 주변의 경제적 이득과 연계되어 있다. 결국, 정치인들이야 말로 금융위기를 방조한 자들이며, 금융위기에 대가를 지불해야할 자들이다.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하면, “나는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 분리된 금융활동 그리고 사회적 생산성과는 무관한 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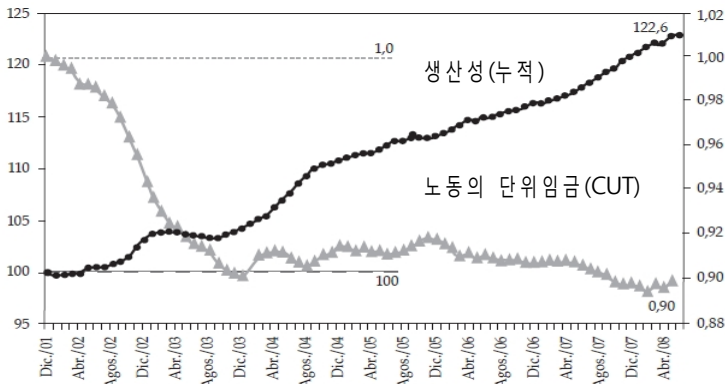
4) “A Special Report on the Future of Finance,” *The Economist*, 24/1/2009, p. 20.

5) Ibid.

이윤창출 활동을 통해 점점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원을 더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본다. 간략히 말하자면, 작금의 현실은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자와 단순히 이윤을 얻는 자들 간에 심도 깊은 괴리가 발생하는 시스템이다.”⁶⁾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노동생산성 증대로 발생한 부의 절반도 채 못 되는 부문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생산성의 증가와 단위임금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응용경제조사연구소(IPEA)와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의 연구를 볼 때 자명해 보인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브라질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따른 이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임금이 생산성에 따른 이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산비 절감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약도 없어질 것이다. 만일 생산성 증가의 이득이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을 경우, 브라질 내 소득 피라미드 상위계층의 재산 축적은 가속화되고 말 것이다.⁷⁾



〈도표 3〉 노동의 단위임금과 브라질 산업의 생산성 지수
(2001년 11월 수치를 100으로 지수화 함)

출처: IBGE에서 발간한 Encuesta Industrial Mensual의 생산, 고용, 임금관련 자료를 필자가 조정함.

6) Ibid., p. 22. The Economist지가 사용한 투기적 투자자(Speculative investors)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로우며, 동시에 저자의 불편한 심기를 잘 대변하고 있다. The Economist지는 Greenspan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금융투기가 자금의 흐름을 위해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변해 온데 대해 지지해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듯하다.

7) IPEA: “Pobreza e Riqueza no Brasil Metropolitano.” 본 저작은 2008년 8월 제7차 대통령보고서에 수록된 바 있다. www.ipea.gov.b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여기에 업무에서 증대된 생산성이 노동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금융의 집중효과가 지속된다면,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말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1995~2004년에서 볼 수 있듯이 GDP 대비 급여 비중이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결국 과도하게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고 말았다.⁸⁾ The Economist지는 우리의 세금과 저축에서 기인한 자금의 흐름을 사회와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III. 정부의 중심적 역할 회복

자원은 정부,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의료보험, 기관투자자 같은 중계기관에 의하여 분배된다. 이런 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원을 축적한다. 그러나 중계기관이라고 해서 이러한 자원을 다른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중계자인 정부는 의회에서 논의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원을 분배한다. 정부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 자원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재정정책 및 자원 활용의 적합성 판단에 반영된다.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정부는 가장 중요한 자원 집행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장 부유하다고 말하며, GDP에서도 정부부문의 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

<표 1>은 GDP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발전 단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GDP가 적은 나라들은 GDP중 정부지출의 비중이 불과 17.7%이나, 이 비율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50% 내외까지 급격히 증가한다.⁹⁾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통적이라 해도 정부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미국을 포함하여).

8) 이러한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80년에는 노동자의 임금이 GDP의 68%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62%로 감소하였다. 출처: IMF, *Finance and Development*, 6/2007, p. 21. 브라질의 경우, 2001년의 통계작성 기준 개편으로 명확한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1995년과 2004년 자료에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1999년에는 38.3%에 불과했으며, 2006년에는 현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40.9%로 개선되었다.

9) George Schieber, Lisa Fleisher, Pablo Gottret: "Getting Real on Health Financing," *Finance and Development*, vol. 43 No. 4, 12/2006, www.im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국가발전도와 공공부문 (2000년 이후)

국 가	GDP중 중앙정부 지출비중(%)
저소득국	17.7
중하소득국	21.4
중상소득국	26.9
고소득국	31.9

출처 : Finance and Development, vol. 44 No. 4, 12/2007.

<표 1>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소비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공공부문의 지출은 이보다 훨씬 크다. 10년 전의 경우 미국의 정부지출은 GDP의 34.3%이며, 유럽지역은 48.2%에 달해 약 14% 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2010년 미국과 유럽권은 각기 GDP 대비 39.9%와 47.1%를 지출하여 그 간극은 8%p로 감소했다.¹⁰⁾ 브라질은 36% 수준이다. 우수한 행정 시스템을 자랑하는 스위스는 66%에 달한다. 모든 케이스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대형 금융기관 등을 살리기 위해 정부지출이 확대되기 이전의 수치임을 밝혀둔다.

국가의 융성과 공공부문의 참여 간에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가 변하고 있다. 과거 세계에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가족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우물에서 물을 길고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웠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인구는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에서는 사회적 투자가 보편화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망, 학교, 치안 등 거주민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들은 오로지 강한 공공부문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공공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의 부문 간 구성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수십 년 전에는 제조업, 농업, 상업 활동을 생산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오늘날 사회정책은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군수 산업도 자동차 산업도 아닌 의료 산업으로, GDP의 16%를 차지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교수 학생 등을 포함한 교육부문에 속한 인구가 6천만에 이르며, 전 국민의 1/3이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예는 사회정책이 모든 이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모세관 현상이나 노동집약적 특성 등을 통해 사회재건의 중요한 요소로

10) *The Economist*, 14-20/3/2009, p. 37, Newsweek의 자료를 재인용.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소득이 높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은 비정부 공공부문이라 부를 수 있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더 자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확장 및 사회정책의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세 번째 변화는 지식사회의 진화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활동은 정형화되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지식에 기반을 둔 테크놀로지를 내포하고 있다. 지식에 진보적인 상품의 핵심가치가 체화되어 있을 때, 체제의 형태는 그에 걸맞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형은 더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 교육기회의 확대, 공공자원의 강력한 참여를 수반한다. 더불어, 사회 내에서의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정보이전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과정을 지원한다. 현대의 테크놀로지에 의해 제고된 지식 이전의 용이성과 공동으로 나눌 때 더 확대되는 지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성장에 힘이어 지식이 창조적 공공재(creative commons)로 변모하는 것은 자연스런 경향이다.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훨씬 더 다양화되고, 분권화되며, 유연한 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 메가트렌드를 고려해 보자. 우리는 네트워크 속에서의 사회와 더 긴밀하게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 이런 틀 속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연대와 협력이 일반화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미래위기의 일반화가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월스트리트의 무책임한 부도덕성은 먼저 좌파진영에서, 뒤이어 우파진영에서도 시스템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우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양 정치진영 모두의 구태의연한 인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산관계는 광의적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현행 규제 메커니즘의 낡은 부분들을 개혁해야 한다. 금융 중계와 자원의 적절한 배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전 세계에 걸친 총체적 위기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장 중심적이다. UN의 정책수단이 그리 강력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세우려는 전략의 수행은 국가차원의 정책의 단순합계를 넘어서 진정 국제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국가는 해당국가 내부의 균형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게임의 법칙을 재정의하는 데에도 더욱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IV. 신용의 새로운 역할

브라질의 금융은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수의 그룹이 시장을 지배한다. 전국금융행정회계경영자협회(Anfac)는 개인 및 법인의 실질대출이율표를 매월 발표한다.¹¹⁾ 아래 제시된 금리표에 따르면, 개인의 연 대출이율은 140%에 달하며, 대출상품에 따라 이를 상회하기도 한다. 최대 금리는 150% 또는 심지어 200%에 달하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기껏해야 6~17%수준에 불과하다. 법인의 경우, 대출 후 최초 3년간은 68% 수준이나, 유럽의 경우 연 3%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Selic(Selic은 Sistema Especial de Liquidação e Custodia의 약자로 브라질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화폐정책과 공개시장조작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이며, Selic금리는 브라질중앙은행의 기본금리이다 -역주)의 최저이율은 자본시장에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기본이율의 변화 없이 19.75%에서 13.75%로 6%p(30.4%) 낮아졌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표 2〉 개인에 대한 대출금리 기준표 (2005. 9. 및 2008. 10. 자료)

상품의 종류	2005년 9월		2008년 10월		차분(%p)
	월이율	연이율	월이율	연이율	
Comercio	6.12%	103.97%	6.34%	109.10%	5.13
Tarjetas de crédito	10.30%	224.27%	10.46%	229.96%	5.69
Cheque especial	8.24%	158.61%	7.93%	149.87%	-8.74
CDC Bancos	3.53%	51.63%	3.25%	46.78%	-4.85
Prest. personal-bancos	5.71%	94.71%	5.62%	92.73%	-1.98
Prest. personal-financieras	11.74%	278.88%	11.62%	274.03%	-4.85
평균 금리	7.61%	141.12%	7.54%	139.24%	-1.88

출처: Anefac, Pesquisa Mensal de Juros

〈표 3〉 법인에 대한 대출금리 기준표 (2005. 9. 및 2008. 10. 자료)

상품의 종류	2005년 9월		2008년 10월		차분(%p)
	월이율	연이율	월이율	연이율	
Capital de giro	4.27%	65.16%	4.18%	63.46%	-1.70
Desc. de duplicatas	3.81%	56.63%	3.78%	56.09%	-0.54
Descuento de cheques	4.01%	60.29%	4.06%	61.22%	0.93
Cuenta garantizada	5.63%	92.95%	5.68%	94.05%	1.10
평균 금리	4.43%	68.23%	4.43%	68.23%	0

출처: Anefac, Pesquisa Mensal de Juros

11) 이와 관련하여서는 www.anefac.com.br에서 *Pesquisa Mensal de Juros*를 참고하라.

브라질의 은행상황은 레버리지가 크고 이율이 낮은 상황에서 업무를 하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카르텔을 구성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Banco Real(Santander Brasil)은 브라질에서 당좌수표에 146%의 이자를 부과하나, Santander España는 5000유로까지는 6개월 이내의 경우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해외 금융기관들은 자국시장의 수백 배에 이르는 폭리를 거두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Anefac이 발표하는 금리에는 각종 부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연구방법을 이용한 IPEA의 연구에 따르면, HSBC가 브라질에서 부과하는 개인에 대한 이율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도 영국 6.60%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63.42%에 달한다고 한다. Santander의 경우는 자국 내에서 10.81%, 브라질에서 55.74%를 부과하며, 시티은행의 경우는 자국 내에서 7.28%, 브라질에서 55.74%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법인에 대해서는 HSBC의 경우 영국에서는 7.86%를, 브라질에서는 40.36%를 책정하고 있다.¹²⁾

이러한 결과는 곧 어마어마한 스프레드(예대마진 -역주)를 의미하며, 더불어 GDP의 39%에 불과한 신용규모를 고려할 때 금융부문에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금융은 브라질 비용(custo Brasil)의 주된 부분이며, 소득의 중앙 집중을 불러오는 주요한 벡터인 동시에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카르텔에 의해 보호된 엄청난 이윤 때문에 거대 기업들은 좋은 서비스와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금융업에 집중하고 있다.¹³⁾

그러나 브라질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국영은행을 통해서 카르텔화된 시장에 경쟁을 재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

12) IPEA: “Transformação na Indústria Bancária Brasileira e o Cenário de Crise.” 이 문서는 2009년 4월 제 20차 대통령보고서 p. 15에 수록된 바 있다. www.ipea.gov.b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상파울루 주정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가장 심했던 10~12월간 이자지출이 급여보다 평균 11% 더 높았다. Fiesp(상파울루주 산업연맹)의 브라질 기업체의 금리부담에 대한 조사는 *O Estado de S. Paulo*, 2/2/2009 또는 www.fiesp.com.br를 참조하라. Bradesco은행의 총 수익은 2008년 76억 헤알에 달했으며, 48백만 명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Programa Bolsa Família(물라정부의 저소득계층 지원 사업, 식료품, 학비, 난방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역주)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110억 헤알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Marcos Cintra(브라질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 -역주)같은 인물조차도 브라질 상업은행들의 금리카르텔과 터무니없는 스프레드를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Folha de São Paulo*, 2/2/2009 p. 3에 실린 그의 “It’s the Spread, Stupid”를 참조하기 바란다.

고 경제에 역동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수단들이 급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형 그룹들의 금융시스템은 경쟁체제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기실 카르텔은 불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Selic의 대출금리를 낮춰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을 위시한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윤을 축소시킨다면, 금융기관들은 생산성이 있는 부문에서 또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실물부문에 자금유입이 증가될 것이고,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가 축소되며, 이는 공공부분 투자로의 자본유입을 진작시킬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공공부채와 매년 1억 8천만 헤알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 압박에 대해 강력한 정책수단의 급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¹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거대 금융그룹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영업활동을 보호받은 국내 금융기관들은 선진국 금융그룹들이 위협에 과도하게 노출되는데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서의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금융 소비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의 용이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접근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에 있어서 금융은 이윤과 사회적 불평등을 집중시키는 중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의 이윤은 금융을 살찌우고 대부자들에게 점점 더 큰 역량을 만들어 준다. ‘누가 돈을 내고 있는가’라는 관점은 부적절하며, ‘우리는 누구에게 지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저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반인들의 돈으로 조성된 금융투기시장을 고려할 때, 투기세력에 대한 보호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됨으로서 모든 돈은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분명히 권력이 대마불사의 논리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는데, 금융기관은 이윤을 창출하건 그렇지 못하건, 경제주체나 활동, 발전의 종류 또는 환경비용 등과 관계없이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은 아무도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역할의 개선을 지적하지 않은 채 작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구습에 얽매인 정책 하에서도 금융은 본연의 경제적 역할을 다해야하며,

14) 이러한 제안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높은 이자가 인플레이의 발생을 막아준다는 이유로 반대파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는 Paul Singer와 Amir Khair의 저작을 살펴보기 바란다.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문제는 브라질만의 것은 아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¹⁵⁾ 브라질의 경우, 전체 인구의 51%를 아우르는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인구 중 오직 16%만이 신용거래가 가능하다.¹⁶⁾ 높은 소요 비용과 엘리트 중심적인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요구한 금융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콩세이상 따바레스(Conceição Tavares: 경제발전론 분야의 저명한 여류경제학자이며, PT소속으로 연방의원에 선출된 바 있다 -역주)가 주장한 사항들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V. 생산 활동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의외로 간결하다. 우리는 지금 위기 양산의 원흉인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게임의 법칙을 바꾸지 않은 채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선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중앙은행을 통해 1천억 헤알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게 되면, 은행은 높은 Selic 금리에 현혹되어 개인과 법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 보다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정부가 의도한 바는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아미르 카이르(Amir Khair: 브라질 공공금융전문가 -역주)는 분석한 바 있다.¹⁷⁾

미국의 경우, 어머 어마한 자금이 금융기관에 투입되었지만, 단 한 푼도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캐나다 글로벌리서치(Global Research)의 Michel Chossudovsky는 ‘대다수의 미국 은행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해 통제력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금융서비스 사업에 합종연횡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⁸⁾

정책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배를 불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보호하거나

15) IMF: *Finance and Development*, vol.44, No. 2, 6/2007, p. 44.

16) IBGE: “Economia Informal Urbana,” IBGE, Rio de Janeiro, 2005, pp. 29-30.

17) “Consumo Interno de Ativação da Economia,” *Estado de São Paulo*, 1/3/2009.

18) “America's Fiscal Collapse,” *Global Research*, 3/3/2009, p. 2.

환경적, 사회적 재편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금융기관에 투입된 자금이 신용의 형태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경제의 새로운 힘은 맥이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발전세미나(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Desarrollo)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분배가 필요하다”는 톨라의 지적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톨라에 따르면, 경제정책은 “생산, 고용창출, 소득의 분배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손실을 본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에 기저에서부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원은 그것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미국 역시 동일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하고 거대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확대정책으로 65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른바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10년간 매년 65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기에 투기꾼들에게 공급된 자원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 이는 파워게임의 부산물이다.

브라질의 전략은 바닥으로 부터의 경제 활성화임이 자명하다. 지우마 후세피(Dilma Rousseff)장관에 의해 제시된 수치들은 경제보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들에 수렴한다. 톨라에 의해 제기된 최저임금 51% 인상정책은 26백만 명에 달하는 최하위 급여생활자는 물론, 18백만에 달하는 은퇴 인구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기금 프로그램(Programa Bolsa Familia)의 확대를 통해서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하였다. 가족영농강화프로그램(Pronaf)은 생산재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진작시켰다. Territorios de Ciudadanía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지역의 주정부에 200억 헤알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모두에게 전력을(Luz para Todos)', '모두에게 대학을(Universidad para Todos)' 프로그램은 국내수요를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성장촉진계획(El Plan de Aceleración del Crecimiento, 본고는 스페인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바, 일부 용어가 스페인어식으로 표기되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역주)은 직접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간접적인 소비재 산업의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후세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백만 가구 건설 사업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경제사회발전은행(BNDES)은 1,680억 헤알을 투자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하며, 이는 경제부흥을 짊어질 한 축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위기에서 비롯된 기회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소득 및 생산자본의 분배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국가가 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위기에 따른 변동성을 감소시킬 목적을 지니고 있다. 경제의 기저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 제공된 신용이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은 돌고 돌아서 소비되고 고용과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높은 스프레드와 엄청난 수익 때문에 대출 규모를 작게 운용하는 악습이 생겨버린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시류에 적응해야 한다.

VI.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수렴정책의 고안

경제위기 직후 시스템의 논리구조 자체의 수리는 외면한 채 시스템의 조정에 대한 제안들만이 무수히 제기되었다. 미래에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며,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 좀 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개조된 시스템은 윤리적 기준을 지니고 움직여야 하며, 위기에 책임을 지는 부문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저축자 대부분의 저축과 연금에 대한 희망이 모두 휴지조가리가 되어버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은 제도적인 밑바탕이 없으며, 기교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투기세력에 의하여 야기된 금융혼란은 재화와 서비스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그 결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정책 변동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다른 제안들이 제기된다. 막대한 자금이 거대 금융그룹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시책의 이행은 또 다른 상황을 야기한다.

절망한 수많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통제권의 명백한 상실과 시스템적 카오스는 새로운 정치기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더 넓은 제안의 타자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돈을 유용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발전의 대안이 되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보자. 정치세력들이 우리가 위기의 근본에 근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너무 큰 꿈을 꾸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위기가 단기나 중기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사회계획, 기후, 에너지, 식량 등 좀 더 본격적인 위기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프리 삭스처럼 밀레니엄 목표(UN 192개 회원국이 2015년 까지 달성하기로 한 공동정책목표 -역주)에 연계된 금융자원의 이용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셉 스티글리츠는 최근 품격 있는 삶의 목적이 GDP 증가가 아닌 자원의 배분문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헤이즐 헨더슨(Hazel Henderson)은 사회적으로 더 정의로운 발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투기세력의 국제적 자본이전에 부과하는 토빈세(Tobin's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역주)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익나시 작스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기가 에너지 위기 등과 결부되어 수렴되는 것에 대한 분석에 열중하고 있으며, 발전모델의 시스템적 구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과도한 이상론을 펼치거나 또는 우리의 도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겠다. 다른 이들의 저축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 소수의 무책임한 자들의 죄로 인해 생산 활동에서 자신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한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작금의 상황은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거대기업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전통적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3억 명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이는 정치적인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급변 문제는 이제야 조금씩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상도 못한 재앙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점점 더 참혹해지고 있다. 화학물질, 부족한 정화시설, 수자원의 고갈 등에 의한 담수의 오염은 어자원의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매년 180만 명의 무고한 어린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금융위기 말고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원의 낭비는 어마어마하다. UN에 따르면, “2000년도의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1일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을 구제하는 비용은 3000억 달러이다.” 화폐의 한계효용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빠르게 향상된다. 다시 말해서, 자원은 빈자들에게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한다.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이는 현재의 기술로도 가능한 매우 간단한 것으로, 자원의 실질가치를 늘려준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최하위층에게 배분된 자원은 효율적인 수요로 전환되며, 이는 투기가 아닌 생산, 고용 등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문제와 환경재앙에 맞서 화폐 활용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해법은 사회 피라미드의 최하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낭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좀 더 생산적으로 자원을 이용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대안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질 수는 없다. 몇몇 대안은 분명해 보이며, 폭넓게 논의 되고 있다. 조세 피난처를 통제하고, 투기적 자본의 흐름에 세금을 부과하며, 금융부분에 규제와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은행 고유의 업무를 투자은행으로부터 분리하고, 금융의 지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는 새로운 금융기구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체계적인 개입과 계획, 협력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족보행을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의 장기적인 시각이 없다면, 이러한 일은 더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무책임한 협력체제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발전의 규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의 열성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과 다른 세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 정치적 진보주의를 향한 도전은 기회의 창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기가 대안의 관점을 체계화시켜준 것이다. 다른 관리방법이 존재할까? 그런 것이 보이는지 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모든 방법들이 취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맞서고 싶지 않다거나 원한다거나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문제는 어떻게 맞서느냐이다. 금융위기는 보장이 아닌 최소한의 경제적 활력,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적 균형 등을 수렴하는 발전에 관심 있는 사회세력의 수렴을 조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VII. 종 언

본고는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에 대한 6가지 서로 다른 시각을 모아 놓은 것이다. 환경과 에너지 생산성의 패러다임, 불평등 문제, 정부의 역할, 신용의 재확립, 생산 활동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역동적 수렴이 그것이다. 작금의 논의는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뎠으며, 건설적 관점에서 진정한 변혁의 제안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